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더불어민주당		
정책순위: 1	제목 :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	정책분야	산업자원, 중소벤처, 재정경제
<input type="checkbox"/> 목 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망벤처기업 발굴·육성을 통해 벤처 4대 강국 도약</li> <li>○ 우수인재 유치 및 모험자본 공급으로 혁신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 다수 배출</li> <li>○ 대출행태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기업 자본조달 지원</li> <li>○ 성장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산업 육성과 4차 산업발전 지원</li> </ul>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이행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망창업기업(K-유니콘 후보기업)의 스케일업(도약)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K-유니콘기업을 30개를 육성</li> <li>-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, 집중 육성</li> <li>-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스케일업 펀드를 4년 간 12조원 조성</li> <li>-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 확대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자본시장의 벤처투자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벤처 투자 연 5조원 달성</li> <li>-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</li> <li>- 클라우드 펀딩 이용이 가능한 기업 범위 확대 추진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벤처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주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 주식 발행 허용</li> <li>- 「벤처투자촉진법」을 제정하고,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기준(20%)을 완화</li> <li>-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및 규제 샌드박스 등을 이용해 규제완화 추진</li> <li>-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</li> </ul> </li> <li>○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연 1억원으로 확대</li> <li>- 엔젤투자자 소득공제, 양도소득세 비과세등 세제혜택 일몰 연장</li> </ul> </li> </ul>			

- 기술혁신형 M&A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(10%→20%)
- 코스닥·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

○ 대출기관 능력 배양 및 행태 개선

- 현재 이원화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
-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
- 대출기관 면책제도를 개편하여 임직원의 입증책임 완화

○ 4차 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

- 바이오, 핀테크, AI 기반의 기술혁신형 기업 양성 지원
-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 분야 벤처기업 지원체계 구축

□ 이행기간

- 유망창업기업 지원 :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
- 자본시장 벤처투자 활성화 :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
- 벤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: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, 2021년부터 적용

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자본시장 벤처 활성화(모태펀드 1조원, 예비 유니콘 보증 400억원), 3대 신산업분야 중소벤처 육성 400억원 등 연간 약 1조800억원 소요되고 벤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연1,500억원 수준으로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더불어민주당		
정책순위: 2	제목 :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과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.	정책분야	산업자원, 중소벤처
<p>□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비·유통환경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 강화</li> <li>○ 소상공인의 안정적 매출기반 마련</li> <li>○ 폐업자의 퇴로확보 등 원활한 재기재원</li> <li>○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 구현</li> </ul> <p>□ 이행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상공인의 매출확대 및 경영부담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온누리 및 지역상품권 발행규모 2배 확대(2020년, 5.5조원 → 2023년, 10.5조원)</li> <li>- 소상공인 우수제품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온라인 진출지원</li> <li>- 교통결제, 온라인 쇼핑물 결제 등 제로페이의 소비자 편의성 제고로 가맹점 대폭 확대 (~2024년, 200만개 목표)</li> <li>-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(4,800만원 → 6,000만원)</li> <li>- 무주택 자영업자의 월세 세액공제 범위를 성실사업자에서 모든 자영업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)로 확대</li> <li>- 범정부차원 단속 및 홍보, 신고포상금 확대로 라벨같이 근절 추진</li> </ul> </li> <li>○ 소상공인 재기지원 등 생업안전망 확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1년부터 매년 1.5조원(7.5만개)의 소상공인 보증공급 추가 확대</li> <li>-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의 채도전 특별자금 확대</li> <li>-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소각(~2024년, 5.6조원) 및 재기지원센터 확대(62개)</li> <li>-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와 점포철거 등 신속한 폐업지원과 임금 근로자로의 취업전환을 지원</li> <li>-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시에도 보상이나 우선계약권 부여</li> </ul> </li> </ul>			

○ 지역별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

-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는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(~2024년, 50곳)
- 상가 밀집구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1기초지자체-1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진(~2024년, 240곳)
- 지역상권의 체계적 분석 및 상권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전략수립 지원 등을 담당할 상권육성전담기구를 설립

○ 소상공인 자생력 기반 강화

-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1:1 현장 컨설팅 대폭 확대
- 실습 등 복합형 교육이 가능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(~2024년, 9곳)
- 입주부터 개발, 전σι판매까지 돕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(~2024년, 40곳)
- 스마트상점, 백년가게·백년소공인 등 소상공인 성공모델 발굴
- 소진공내 소상공인연구센터를 정책연구기관으로 분리하고 기능 확충
- 중소기업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

□ 이행기간

- 법률 제·개정사항은 2020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
- 기존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고
  - 신규 예산반영 사업은 2021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

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5년 간 4.8조원(연평균 1조원 내외) 소요
-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더불어민주당		
정책순위: 3	제목 :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.	정책분야	산업자원, 환경
<p>□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50 ‘탄소제로사회’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및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</li> <li>○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·산업혁신 추진</li> <li>○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</li> <li>○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세제 등 지원 강화</li> <li>○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과 에너지 분권체계 구축</li> <li>○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(<math>10\mu\text{g}/\text{m}^3</math>)으로 40% 이상 감축</li> </ul> <p>□ 이행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</li> <li>○ 탄소제로사회의 법·제도 기반을 마련을 위해 「그린뉴딜 기본법」 제정 추진</li> <li>○ 석탄발전을 보다 과감하게 감축하고,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 확대</li> <li>○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분야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</li> <li>○ 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산단으로 만들어 순환경제 토대를 구축</li> <li>○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PNG 인프라와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</li> <li>○ 미래차(전기·수소차)와 전후방 연계산업(2차전지, 수소연료전지 등) 육성</li> <li>○ 분산전원 기반의 Smart-Green 비즈니스 모델 창출</li> <li>○ 에너지 제로 빌딩 건축에 대한 지원 강화</li> <li>○ 건물·공장(FEMS)·주택에너지관리(HEMS) 분야 에너지효율화 전문기업 육성</li> <li>○ 그린뉴딜 재원마련을 위해 중·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 검토</li> <li>○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로 민간주도 투자 확대</li> <li>○ 녹색경제 분야에 투자할 경우 세제감면 확대</li> <li>○ 석탄금융을 중단하고, 녹색금융·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 유도</li> </ul>			

-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더욱 확충하여 에너지, 산업, 수송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부문에 투자 확대
  - 지자체별로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하여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 지원
  - 노동자들의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 제공
  - 지역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
  - 소규모 전력거래 등 에너지프로슈머 제도 확대
  -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
  -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 $10\mu\text{g}/\text{m}^3$ 로 감축
  - 오염물질 점(사업장)-선(수송)-면(도시) 관리전략과 권역별 총량제 추진
  -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-중-일 협력체 구성 운영
  - 산단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측정차량을 활용한 실시간 단속 강화·무인비행선 운영 확대
  - 1-3종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배출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확대 및 4-5종 사업장 배출가스감시센서 부착 확대
  - 4-5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0,000개소로 확대
  -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 추진(도심지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망 구축, 대피용 클린 공간 조성, 미세먼지 저감용 쿨링·클린 로드 조성, 신축 및 중장기 저감 조치 시행)
  - 국민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
- ☐ 이행기간
- 2020년 ~ 2024년까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제로화 사회 실현과 같은 장기적인 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추진
- ☐ 재원조달방안 등
-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
  - 국비와 지방비 및 기금 활용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더불어민주당		
정책순위: 4	제목 : 주거와 안전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.	정책분야	청년, 여성
<p>□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</li> <li>○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</li> </ul> <p>□ 이행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청년·신혼 맞춤형도시 조성, 5만호 공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를 연계한 청년·신혼 맞춤형도시를 조성하고 청년·신혼주택 5만호 공급</li> </ul> </li> <li>○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등을 통해, 4만호 공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연계하여, 주거·창업·일자리·R&amp;D·문화시설이 복합된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여 주택 4만호를 공급</li> </ul> </li> <li>○ 서울 용산 등 코레일부지, 국공유지에 1만호 공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·공유지 등에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연계한 청년·신혼주택 1만호를 신규 공급</li> </ul> </li> <li>○ 청년·신혼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, 대출한도 확대, 상환기간 연장한 청년·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</li> <li>-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양도차액을 대해서는 공공과 공유</li> </ul> </li> <li>○ 청년,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2년까지 공공주택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 100만가구로 확대</li> <li>-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, 청년디딤돌전세금 이자금리 인하, 주담대 등 시중은행 청년전월세 대출금 규모 확대 2021년부터 별도거주 취준생·대학생 가구에 주거급여 추진</li> </ul> </li> </ul>			

○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

-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여성안심앱, 전국CCTV, 국가재난안전체계(112, 119 등),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과 연계 여성안전 서비스 강화
- 범죄예상 환경설계활성화 추진, 여성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 취약개소 범죄예방시설(LED조명, 양방향통신 비상벨, 신고위치안내판, 반사경 등) 설치 확대

○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

- 가정폭력 피해자가해자 격리를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장 체포주의 도입
- 피해자 보호명령에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및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

○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다각적 추진

- 변형카메라 수입·판매 및 소지 등록제 도입, 이력정보시스템 구축
- 피해상담·삭제지원·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강화
- 인공지능(AI) 기술,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통한 불법촬영물 신속 삭제 지원
-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소지자, 유포 협박과 사진·영상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

○ 스토킹처벌특별법 제정

- 스토킹 범죄의 정의,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처벌 규정 구체화
-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재발 방지대책 수립

○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

- ‘폭행 또는 협박’이 아닌 ‘동의’ 여부를 구성 요소로 판단

□ 이행기간

-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난 완화 :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
-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법률 개정 :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 추진

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
- 10만호 주택건설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 활용
-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: 국비 50%, 지방비 50%를 지출개혁 등을 통해 반영

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더불어민주당		
정책순위: 5	제목 :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에서 국민에게 건강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.	정책분야	농림해양수산
<div> <div>□ 목표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산어촌 삶의 질 개선 및 공익형직불제시행 등 농림어민 소득증대</li> <li>○ 체계적인 안심 먹거리 제공, 안심축산·방역강화로 국민건강 뒷받침</li> <li>○ 스마트농업·식품산업 지원, 청년·여성농어업인 육성으로 미래혁신 견인</li> </ul> <div>□ 이행방법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 선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, 농어촌 공공병원·분만취약지역 의료인프라 확충, 농촌지역 사회적 농장 활용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,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등 농어촌 의료·복지서비스 확충</li> <li>- 지방대 의·약학 계열학과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농어촌 공공도서관 조성 확대</li> <li>- 어디서나 기초·복합서비스 접근성 보장 3·6·5 생활권 구축, 농촌공간계획 제도화</li> <li>- 100원택시·1000원여객선·효도택시·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등 다양한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및 농어촌 빈집·유희시설 활용 귀농인 임시주거·청년 창업공간 지원</li> </ul> </li> <li>○ 농어업 공익형직불제를 조기 정착시키고, 농산물 수급·안정 대책 등 소득 향상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불제 참여 농업인 준수 의무 이행점검체계 및 부정수급 방지방안 등 마련</li> <li>- 어가의 소득안정망 확충 및 수산분야 공익기능 확대를 위한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</li> <li>- 재해보험확대, 농어업부문 조세감면, 연금보험료 지원 등 농어민소득 지원</li> <li>-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강화, 의무자조금제 확대 및 일선조합판매능력을 강화하고, 농어업회의소 설치로 농어촌 현장의견 수렴</li> <li>- 임업인의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및 임업인 자연 재해안전망 구축, 임도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, 임업직불금제 도입을 검토</li> </ul> </li> <li>○ 체계적인 안심 먹거리 제공, 안심축산·방역강화로 국민건강 뒷받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교, 공공기관, 공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</li> </ul> </li> </ul> </div>			

- 취약계층 영양지원 농식품바우처제도, 초등생 과일간식 지원, 임산부·산모 친환경 농산물 공급지원 단계적 확대로 국민 건강먹거리제공 및 중소농 생산 농축산물 안정적 판로 확대
- 축사시설·소독시설 현대화 등 가축질병 발생 예방체제를 강화하고, 스마트축산 ICT 단지를 조성하여 축산업 위생·생산성 향상 및 악취민원 해결
- 농업스마트화, 농식품산업육성, 청년·여성농업인 육성으로 미래혁신 선도
  -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 스마트 온실·축산농장업 보급 및 관련 R&D 확대
  - 메디푸드, 고령친화식품, 대체식품, 기능성식품 등 유망식품분야 R&D 집중 지원 및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로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
  -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금 상향,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금리인하 등으로 청년농업인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,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을 육성
  - 여성 공동경영주 등록활성화, 농어촌 성평등교육 확대, 여성농어업인 지원센터 확대, 농식품부·해수부 내 여성정책전담조직 확대, 여성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제도 마련 등 추진

#### □ 이행기간

- 농어업인 삶의질 개선 대책 :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
- 공익형직불제, 가격안정정책, 먹거리정책·스마트팜 등 : 2020부터 2024년까지 추진

#### 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농어촌 삶의질 개선, 공익형직불제, 스마트팜·청년농업인육성, 농산물유통혁신 등 각종 농업경쟁력제고 대책 등에 연평균 약 4조원 소요로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더불어민주당		
정책순위: 6	제목 : 국립대학의 교육의 질은 높이고 등록금 부담은 낮추겠습니다.	정책분야	교육
<p>□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육·연구 여건이 주요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국립대를 집중 지원하고, 반값등록금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립대를 지역균형발전 요충지로 육성</li> <li>○ 저소득층 및 7~8구간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단가 확대를 통해 등록금 부담 경감 실효성 강화</li> <li>○ 학자금 대출 이용대상 확대, 금리 인하, 전환대출 적용 등 통해 ‘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’하기 위한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 운영의 본래 취지 제고</li> </ul> <p>□ 이행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간 1천 5백억원의 국립대 육성사업을 확대·재편하여 9개 거점 국립대에 5백억원, 19개 국립대에 1백억원씩 지원(6천 4백억원으로 확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OECD 평균 수준 달성, 주요 사립대 수준 목표로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 확대</li> <li>- 우수 교원 확보, 자료구입비,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및 노후 시설 개·보수 등 교육여건 개선</li> <li>- 지자체·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공공기관, 연구소, 지자체 등과의 전략적 상생·발전 유도</li> <li>- 국립대 종합 취업지원센터 설치해 양질의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</li> </ul> </li> <li>○ 연간 평균 419만원인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후에도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지원 유지하여 학생들의 학비·생활비 부담 크게 경감 → 지역 우수인재 유치</li> </ul> </li> <li>○ 국가장학금 지급 단가 확대 통해 사각지대 해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저소득층(기초수급·차상위·1구간)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단가 연간 520만원에서 사립대 평균등록금 100%수준(736만원)으로 인상</li> <li>- 연간 지급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7구간(120만원, 학기당 60만원) 및 8구간(68만원,</li> </ul> </li> </ul>			

학기당 34만원) 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→ 7구간 220.8만원(사립대 등록금 30%), 8구간 147.2만원(사립대 등록금 20%)

○ 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통한 등록금 부담 경감

-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취업후 소득과 연계하여 일정 비율 상환하는 ICL(취업후 상환 학자금) 이용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→ 연구비·장학금 수혜가 적은 대학원생 및 로스쿨 학생 등 등록금 부담 경감
-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금리를 조달금리 수준(1.6~1.7%)으로 인하
- 2009년 이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(이자율 6~7%) 및 2010~2012년 일반학자금 대출(이자율 4.8%) 등 고금리·장기간 상환 대출을 단계적으로 저금리 전환
- 장학재단 학자금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포함 → 채무조정 지원 제도 취지 강화, '도덕적 해이' 방지 위해 단계적·제한적 추진

□ 이행기간

- 국립대 육성 지원 및 반값등록금 : 2021년부터 추진
- 국가장학금 사각지대 해소 : 2021년부터 추진
-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: 2021년(ICL 대학원생 포함, 정부보증 학자금 전환대출) 및 2022년(금리 인하 및 일반학자금 전환대출, 채무조정 지원 대상 포함)부터 추진

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국립대 육성 지원 및 반값등록금 : 국가균형발전위원회, 기획재정부, 교육부 등 협의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신규 편성
-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: 교육부 일반회계 사업(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 및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) 증액 추진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더불어민주당		
정책순위: 7	제목 :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.	정책분야	노동
<div> <div>□ 목 표</div> <div> <div>○ 노동존중 51플랜추진</div> <div>○ 「헌법」 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추진</div> <div>○ 일자리 체인지업(Change up)으로 ‘고용의 사회적 정의’ 실현</div> <div>○ 고용안정 및 보장을 위한 ‘고용연대’ 실현</div> </div> </div> <div> <div>□ 이행방법</div> <div> <div>○ ‘5인’ 미만 사업체 노동자(588만명)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보장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근로기준법」 개정으로 적용범위 전체 노동자로 확대</li> </ul> </div> <div>○ ‘1년’ 미만 근속 노동자(497만명) 퇴직급여 보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개정으로 최소근속기간 하향</li> <li>- 저소득 노동자의 퇴직연금에 대해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, 재정지원</li> </ul> </div> <div>○ ‘플랫폼’ 노동자·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 보장과 노조 할 권리 보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고용보험법」 등 개정으로 고용·산재보험 의무화 및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</li> </ul> </div> <div>○ 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ILO기본협약 제87호·제98호·제29호·제105호 비준</li> </ul> </div> <div>○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‘노동조합법’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분별한 손해·가압류 및 쟁의행위에 대한 민·형사책임 제도를 개선, 공익사업의 범위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등</li> </ul> </div> <div>○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의 ‘스스로 권리 찾기’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근로기준법」 개정 등으로 ‘근로자 대표’ 의 역할과 기능을 제도화</li> </ul> </div> <div>○ 상시·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근로기준법」 등 개정으로 상시·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</li> </ul> </div> <div>○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기업 노동자에 대한 ‘차별 Zero’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기간제법」 등 개정으로 차별시정제도 실질화</li> </ul> </div> </div> </div>			

- 노동자의 임금권리 보장을 위한 ‘임금분포공시제’ 도입
  - 「고용정책기본법」 개정으로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정보의 주요 항목 임금분포를 분석·가공하여 공시
-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(도급인) 책임 강화
  - 하청·파견노동자 산재도 원청(도급인) 사용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 포함
  - 사망사고 다발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할인을 조정. 산재 감소 시 할인
- 정리해고 요건강화, 강요된 희망퇴직 ‘근로자대표 동의’ 법제화
  - 「근로기준법」 개정으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제도화
- ‘인생 이(삼)모작’을 위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활성화
  - 계속고용활성화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지원
  - 중고령 노동자가 재직단계부터 인생 이(삼)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‘생애경력설계 등 재취업지원서비스’ 종합시스템을 강화
- 장기실업자·폐업 자영업자 등 ‘취업취약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’ 도입
  - 「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(안)」 제정으로 저소득 구직자, 폐업 자영업자, 청년 등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
  - 구직자전담상담사(‘취업코디’)를 운영으로 구직자와 1:1로 맞춤형 심층상담
- 영업 양도 등 사업이전 시,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
  - 「근로기준법」 개정으로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
- 재직자 체당금제도 신설 등 ‘채불임금 국가 우선 해결’
  - 「임금채권보장법」 개정으로 재직자 체당금 및 채불임금 지연이자제 등 도입

#### □ 이행기간

- 제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 추진 및 예산 확보

#### 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저소득 노동자 퇴직연금 공적 자산운용서비스 :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조달
- 채불임금 국가 우선해결 :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조달
- 국민취업지원제도 :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
- 중장년층 고용지원서비스 : 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더불어민주당		
정책순위: 8	제목 : 스마트 정예 강군, 국익 외교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·번영을 만들겠습니다.	정책분야	통일, 외교, 국방
<p>□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 구현으로 세계 5위 국방력 건설</li> <li>○ 평화경제로 한반도 평화 번영 실현</li> <li>○ 주변 4국과의 외교 강화, 신남방·신북방 정책을 통해 평화정착 및 번영발전 추진</li> </ul> <p>□ 이행방법</p> <p>&lt;통일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남북정상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: 환동해·환서해·DMZ평화벨트 조성, 금강산관광,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재추진, 통일경제 특구 설치, 한반도 교통물류망 연결</li> </ul> </li> <li>○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화·역사·언론·체육·학술·언론·종교 등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</li> <li>- 남북 국회회담 추진, 지자체의 남북협력 지원, 2032 서울-평양 공동올림픽 유치</li> </ul> </li> <li>○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과 통일공감대 확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시상봉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이산 아픔을 치유할 ‘이산가족 기억 클러스터’ 조성, 국군포로·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</li> <li>- 북한주민 인권 개선 노력과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추진</li> <li>-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각지대 해소, 촘촘한 취업지원 등을 통합 종합지원대책 추진</li> <li>- 사회적 대화를 통한 ‘통일국민협약’ 체결과 지역 통일사업 종합 거점 마련, 통일교육 강화, 민주평통 기능 강화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외교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강화와 신남방·신북방 정책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미동맹을 호혜적·포괄적 동맹으로 발전, 한미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도출</li> </ul> </li> </ul>			

-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 발전, 한일간 역사문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원칙에 입각한 문제 해결 추진하되 미래지향적 발전 위한 정부당국간 소통 및 민간차원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
- 한러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, 고위급 교류 지속 확대, '9대다리 행동계획' 추진
- 아세안 국가들과 실질적 협력 강화와 한-인도 외교협력 강화로 신남방정책 추진
- 국민외교·공공외교 확대를 통한 국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동포 지원 확대
  - 국민과 정부간 쌍방향 소통 체계 구축하여 외교정책 결정과정 국민들 의견 수렴
  - 공공외교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통합적·체계적 공공외교 추진
  - 해외체류 국민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 역할 강화, 국민 공감 영사서비스 추진

#### <국방>

-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혁신으로 '디지털 강군, 스마트 국방' 구현
  - '신속획득제도' 활성화, 핵심기술·핵심부품의 국산화 연구개발 적극 지원
  - 중견, 방산기업 육성과 함께 원스트라이커 아웃제, 방산분야 취업제한 기관 대상 확대 등 더욱 엄격한 규제를 통한 방위사업 비리
-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및 전략적 억제 능력 강화
- '정예 강군제' 도입 및 장병복지 구현,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지속 추진
  - 간부중심 병력구조 개편, 군 간부(소령)의 정년 변경 추진
  - 기혼 간부 전세 대부 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미혼 간부 전·월세 지원 확대
  - 현역병 단체보험 제도 도입, 국방 맞춤형 복지금(출산축하금) 확대
  -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과 동원훈련 보상비 및 중식비 현실화

#### □ 이행기간

- 2020년부터 지속 추진

#### 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남북 협력사업은 남북협력기금으로 해결
- 무기 전력 체계는 국방중기계획 편성에 따라 집행. 군인 복지 예산은 복지기금(연간 1조2천억 규모)으로 해결

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더불어민주당		
정책순위: 9	제목 : 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및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.	정책분야	복지, 보건
<p>□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 복지수요가 집중되는 계층의 안전망 확충</li> <li>○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공지역의료체계 기반 강화</li> </ul> <p>□ 이행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생활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령자복지주택 등 어르신 지원주택(supportive housing) 공급 대폭 확대</li> <li>- 노인 일자리 매년 10만개씩 지속적 확대</li> <li>- 기초연금 대상 전체 어르신의 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</li> </ul> </li> <li>○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하위 70% 중증장애인 전체로 단계적 확대</li> <li>-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</li> <li>- 장애인 노동권 및 주거권 보장 강화(장애인 의무고용 내실화, 장애인 일자리 확대,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확대,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강화 등)</li> <li>- 장애인 교육권 및 이동권 보장 강화(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, 장애인 문화·예술·체육 활동 지원 확대, 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)</li> </ul> </li> <li>○ 아이돌봄 안전망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보격차 해소를 통한 모든 아동들의 균등한 발달기회 보장</li> <li>-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확대</li> <li>- 학교와 마을이 아이를 돌보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</li> </ul> </li> <li>○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질병관리본부의 ‘청’ 승격 등 위상 및 역할 대폭 강화</li> <li>- 질병 ‘지역본부’ 신설·검역소 추가 설치·검역인력 대폭 확충</li> <li>-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 신설</li> <li>-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·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</li> </ul> </li> </ul>			

-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·공공-민간병원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

○ 의료인력 확충 및 의사과학자 육성

- 의대정원 확대 통한 필수·공공·지역 의료인력 확보

- 의과대학 정원 합리적 조정 통한 의학교육의 질 향상

- 의사과학자 육성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 동력 창출

□ 이행기간

○ 2020년부터 단계적 추진

- 중장기 추진 계획 제시 및 21대 국회 임기 내 추진 목표치 제시

□ 재원조달방안 등

○ 재원조달은 정부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개혁과 비과세 조정 등 세입확대 통해 마련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더불어민주당		
정책순위: 10	제목 : “문화·예술 1등 국가”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.	정책분야	문화
<div>□ 목 표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화예술인 창의적 생산활동 지원</li> <li>○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</li> <li>○ 콘텐츠·관광산업 경쟁력 강화</li> <li>○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</li> </ul> <div>□ 이행방법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화예술인 창조역량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화예술기관의 실업보험제도 구축 및 예술인 프리랜서 국민연금 지원</li> <li>- 문화예술복합지원센터 건립 및 경력단절 예술인센터 전국망 구축</li> <li>- 신진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</li> <li>- 예술인 프리랜서 협동조합 모델 발굴·지원</li> </ul> </li> <li>○ 국민 문화향유권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카드 발급 및 학교 첫 걸음 문화체험 관람 지원</li> <li>- 근로자휴가지원제 및 통합문화이용권 확대</li> <li>- 매월 마지막 금요일 조기퇴근의 2.5휴가제 캠페인</li> <li>- 어린이·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콘텐츠 확대 및 60대 이상의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확대</li> <li>- 주민자율의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</li> </ul> </li> <li>○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콘텐츠 정책금융 및 콘텐츠 R&amp;D예산 확대</li> <li>-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</li> <li>- 콘텐츠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한 ‘코리아 콘텐츠밸리’ 조성</li> <li>- 국내 K-POP국제 콘텐츠 개최 및 아레나형 K-POP 공연장 확보</li> <li>- 영화발전기금 국비 출연 및 조성재원 일몰 연장</li> <li>- ‘국립영화박물관’ 건립</li> </ul> </li> </ul>			

○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

- 성수기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성실 모범업소 인증 및 홍보·설비 지원
- 개별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빅데이터플랫폼 구축
- 외국인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 특례 확대 및 연장
- 면세점 리베이트 관광 철폐 및 무자격가이드 근절 강화
- 항공사(지역항공)·지자체·지역관광업체 관광상품 프로모션 지원
- 해외노선 신규취항 관광기금 융자 지원

○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

- AR·VR 스포츠체험관 조성
-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 지속 확충
-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확대
- 은퇴선수 협동조합 창업지원 등 전문 체육인 복지 강화

□ 이행기간

○ 2024년까지 사업완료

- 문화예술인 창조역량 강화
- 국민 문화향유권 강화
-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
- 콘텐츠·관광산업 경쟁력 강화(일부 제외)

○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중 콘텐츠코리아밸리는 2024년 내에 사업부지 선정 및 기초 인프라 건설, 이후 교육기관 등 입주시설 설치·운영

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국가문화예산 증가분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
- 관광·체육기금 여유분 활용